

[분야별 정책] 금융

1. 총론

자본시장 개방도와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구조는 급격한 외화 유입과 유출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요구한다. 토빈세 알려진 외국환거래세 도입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은 수출절벽이 거론되는 저성장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더욱 절실하다. 가계부채 1200조원은 금융거시 건전성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금융자본보유세는 노동당의 사회화 강령을 초보적인 수준에서 구현하기 위한 정책이다. 금융자본보유세로 걷힌 세수는 가계부채 탕감에 우선 사용하고, 장기적으로는 IMF 이후 민영화된 주요 금융기관의 재사회화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것이다.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위해서는 금융자본 사회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외국환거래세와 금융자본보유세는 세수 확보의 측면보다 외환거래의 안정성과 금융 사회화 측면에 주목한 정책 수단으로서 조세정책보다 금융정책의 의미를 가진다.

금융시장의 개방에 맞춰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도 거의 없어진 반면에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제도와 감독행정은 미미하기만 하다. 약탈적 금융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제시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가 가장 취약한 분야가 금융이다.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많은 정책들이 있으나, 여기서는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개인질병정보의 집중과 오용을 막을 정책, 그리고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새로운 과제를 던진 빅데이터(big data)의 위험성과 관련한 정책을 제시한다.

2. 정책

1) 외환거래세 도입 등 외환시장 안정성 강화

□ 현황

•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자본유출입 규제책 도입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그로 인한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제도가 2010년부터 도입됨

<자본유출입 규제제도 현황>

구분	대상	내용
선물환포지션 한도	통화관련 모든 파생상품	국내은행 : 전월말 자기자본의 40% 외국은행 : 자기자본의 200% 증권·종금사 : 50% 이내
외국인 채권투자소 득에 대한 비과세를 과세로 전환	채권의 이자소득 과 양도소득	이자소득(14%), 양도소득(20)를 적용 하고 긴급 필요시 탄력세율 허용
외환건전성부담금	비에금성 외화부 채	0.5% 한도 내에서 만기별 차등 적용

• 한국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 저성장 국면에서 달러 획득의 주요 수단이었던 수출의 정체 하락이 지속되면 외환보유고를 줄일 것이며, 이에 따라 외화자산의 국내시장 탈출에 따른 위기는 높아질 우려
- 수출절벽과 같은 상황적 위험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본시장 개방은 중앙은행 통화정책이 국내 경제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제약함
- 수출 증대나 수입 감소로 경상수지가 흑자를 달성하더라도 환율 변동에 의해 대외자산과 대외부채의 결산으로서 '순대외자산'은 오히려 감소하기도 하며, 이런 원리에 의해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말의 순대외자산은 -610억 달러였으나 2012년 말에는 오히려 -1,030억 달러로 나타남.
- 한국은 1997년 IMF 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 2013년 북한 리스크와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화환율의 변동성 확대 등 대외적 환경변화에 환율변동성이 높게 반응했으며, 일반적으로 한국의 환율 변동성은 매우 높은 편에 속함
- 한국의 높은 환율 변동성은 높은 자본시장 개방도로 높은 외국인의 주식보유 비중, 수출주도성장 모델에 따른 높은 무역의존도 등이 주요한 원인임

□ 정책

• 외환거래세 도입(외국환거래세법 제정)

- 대외지급수단으로 내국지불수단을 매입할 때 매입액의 0.03%를 외국환거래세로 부과한다.
- 전일 대비 환율 변동폭이 2~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20%의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 선물환포지션 한도의 기준을 강화

- '전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 현행 선물환포지션 한도의 기준을 주간 단위로 변경한다.

• 외국인 채권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 노동당 조세개혁안은 분리과세되고 있는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을 종합과세하여 누진과세하는 것이다. 외국인의 채권소득 역시 같은 방식으로 누진과세한다.
- 이와 별도로 외국인 채권세를 도입하여, 외국인의 만기 5년 이하 채권투자에 대해서는 환전 시 6%의 세율로 과세한다(브라질 방식).

2) 가계부채 축소

<노동당 2016총선 핵심정책2. 소득기반 경제>에서 상술

□ 정책

• 이자율 최고한도 15% 인하와 대부업 특혜금리 폐지

-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최고한도를 현행 25%에서 15%로 인하
- 대부업에 대한 특혜금리(2016년 2월말 현재 27.9%로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를 폐지하고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15%에 일치시킨다.

• 대규모 개인 부실채무 정리(가계부채 탕감)

- 연체기일, 자산과 소득, 연체액수 등을 감안해 2년에 걸쳐 최소 200만 명 이상의 채무자에 대해 채무전액 면책을 포함한 대규모 부실채무 정리
- 국민행복기금의 평균 원금감면율 50%를 약 70% 수준으로 높인다.
- 소요 예산은 연 10조원씩 약 20조원

• **채무재조정 제도의 개혁(개인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 파산자에 대한 당연면책제도 도입
- 파산 선고후 복권까지의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현행 원칙적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명문화
- 파산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 **가계부채 목표 관리**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OECD 평균 수준 이하로 낮추는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적 관리
- GDP 대비 가계부채와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세계경제포럼(WEB)이 설정한 임계치 이하로 관리

<세계경제포럼(WEB) 가계부채 임계치>

구분	WEB 지표	임계치
저량(stock)	부채잔액/GDP	75
유량(flow)	원리금상환액/가처분소득	20

• **LTV·DTI 규제의 회복**

- “빚내서 집사라” 정책의 주요 수단이었던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를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회복한다.
- 1차적으로 2014년 8월 규제완화 이전 수준의 회복이 목표점

<LTV·DTI 규제완화 내용>

		기존		변경 (2014.7)
		은행, 보험	기타 비은행	전 금융권
LTV	수도권	50-70%	60-85%	70%
	기타	60-70%	70-85%	
DTI	서울	50%	50-55%	60%
	경기/인천	60%	60-65%	

주: 기존에는 만가·담보가치 등에 따라 다른 규제비율 적용

3) 금융자본보유세 도입과 금융 사회화기금 조성

<노동당 2016총선 핵심정책2.소득기반경제>에 상술

□ 문제의식

IMF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 자유화로 주요 은행의 지분 구성에서 외국인이 압도적인 상황이 되었다.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주요 금융지주회사의 외국인 지분율이 2015년 말 현재 70% 안팎이다. 외국인 은행 투자자들의 단기수익 중시 경향은 기업대출을 줄이고 가계대출을 늘리는 결과로 나타났다. 국내은행의 총여신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1999년 말 23%에서 2015년 6월말 42.5%로 늘어났다.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규모에 이른 가계부채 1200조원 시대는 은행의 민영화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주요 은행의 높은 외국인 지분율은 또한 금융위기의 가능성과 폭발력을 높이는 요소이다. 은행 등 금융권의 외국인 지분이 일시에 빠져나갈 경우 총체적 경제위기로 진행되며, 이는 IMF 외환위기 당시 경험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주식과 채권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아직 없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극단적인 소득불평등이 자산의 불평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점,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부과하는 반면 산업에 대한 지배력이 월등한 금융자본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산복합체로 전체 산업을 지배하는 재벌의 사회화를 위한 재원을 금융자본 보유세의 주요 과세대상이 될 재벌에게 부과할 필요가 크다. 생산수단 사회화는 필연적으로 금융부문의 사회화 단계를 밟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자본 보유세로 조성된 자금을 IMF 외환위기 이후 민영화된 주요 은행에 대한 지분 매입 용도로 사용한다.

금융자본 보유세는 자료의 한계 등으로 아직 정교한 정책적 설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 정책

• 금융자본 보유세 부과

과세 방법으로 주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증권양도소득 대주주에 대해 부과하는 방식과 시가기준 일정 금액(ex,1,000억원) 이상 보유자에 부과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고 채권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 보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 금융자본 보유세 세수로 금융 사회화기금 조성

-사회화기금으로 은행 및 금융기관의 주식을 매입해 김대중 정부 이후로 민영화된 주요 은행을 점진적으로 사회화한다.

-사회화된 금융기관의 수익은 생산기업 사회화 및 기본소득 재정으로 사용한다.

4)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현황

• 대규모 금융피해사건의 빈발

-키코 사태 : 2007~2008년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 집중 판매한 파생상품 ‘키코’(KIKO ; Knock-in Knock-out)는 환율 변동에 따른 은행의 손실구간은 제한적이지만 가입 기업의 손해는 무한대로 설계돼 있었음에도 주거래은행의 지위를 이용해 상품구조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판매해 2008년 환율 급등으로 700여 중소기업이 3조 원대의 손해를 입었고, 2010년 기준 110개 중소기업이 도산했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도 대부분 기업이 패소했다.

- 저축은행 사태 : 2011년 부산저축은행 예금인출 사태를 출발점으로 시작된 ‘저축은행 사태’에서 금융소비자 피해를 키운 결정적인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는 ‘후순위채권’이었음. 대부분의 금융소비자가 고위험 상품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구매했다.
- 동양그룹 사태 : 2013년 하반기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에서 동양증권은 계열사들의 재무 상태가 기관투자자가 기피하는 투기등급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보에 취약한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계열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팔아 대규모 금융피해자들을 양산
- 카드3사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건 : 2014년 1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3사가 보유한 고객의 개인정보 1억건이 유출됨. 계속되는 금융기관 정보유출 사건 중 최대의 사건으로, 대부분의 국민의 개인정보가 마케팅 용도나 금융사기 용도로 판매되고 있는 현실. 마땅한 피해구제 사법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 개인 금융사기사건에서 선의의 피해자 속출 : 피싱, 스미싱, 파밍 등 신종 금융사기 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사기사건에서 선의의 피해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분담하는 제도가 없어, 피해자가 피해액에 대한 채무의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해 승소해야 함. 미국의 경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2 영업일 이내 금융회사에 신고하면 피해자의 책임을 50달러 이내로 제한하고, 60일 이내 신고하면 500달러 이내로 제한. 접근장치(통장, 카드, 인증서 등)의 분실·도난과 관계없는 금융사기 사건에서는 60일 이내 신고하면 전액 면책된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13개월 이내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완전히 면책한다.

• 시사점

- 금융기관이 판매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종류, 판매방식 등은 규제 없이 개방된 반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는 극도로 취약
- 금융소비자보호가 가장 뒷전에 밀려 있는 금융감독체계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 이뤄진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산업 육성이 금융감독에 우선하고, 금융감독행정 안에서도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이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우선해, 금융소비자 보호가 가장 후순위 가치로 밀려나 있다. 이러한 감독체계는 금융관료들의 금융기관과의 유착이 중요한 이유임.
- 금융피해에 대한 사법구제 제도의 부재 : 불특정 다수에게 대규모로 일어나는 금융 피해사건을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사법 절차가 없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대표적이다. 사법구제 절차가 부실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유인이 없는 셈이다.

□ 정책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면허제 도입
-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해 상품의 위험성을 표시하도록 함
- 금융상품 등급에 따라 판매장소의 분리
-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등을 현행 자본시장법의 규정보다 세세하게 규정
-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 도입

- 금융소비자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등에 관한 정책의 심의·의결 기구로서 금융소비자위원회 설치
-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여부와 무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 핵심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된 위상을 갖는 것이다.
- **금융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금융소비자보호원 산하에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를 위한 조직으로 금융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 금융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은 금융기관에 대해 일정한 구속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 **금융사기사건의 책임배분 기준 마련(전자금융거래법 개정)**
 - 금융범죄로 인한 선의의 피해에 대해 동일 기준으로 선의의 피해자 보호
 - 피해자의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는 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지는 것을 명확히 규정

5) 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

□ 현황

- **생명보험협회의 개인질병정보 과잉수집**
 - 생명보험협회는 2002.10.7. '보험계약정보 및 보험금지급 정보' 총 36개 항목을 집중관리·활용 대상 정보에 추가해 줄 것을 당시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에 신청하고 금감위는 이중 25개 항목을 승인.
 - 금융감독원의 생보보험협회 검사 결과(2013년 1·2월) 결과 생보협회가 2002년 승인받은 25개 항목보다 훨씬 많은 185개 항목의 개인정보를 무더기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있음을 적발함. 이 중에는 수술과 치료 기록을 포함한 초민감 개인질병정보도 포함되어 있음.
 - 헌법상 권리인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침해하는 이 같은 개인질병정보의 집중조차 법률 형식이 아닌 금융위의 '해석'에 의해 이뤄진 상태이다.
 - 2016.1.5.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보험개발원 6개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집중한 '한국신용정보원'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출범
 - 한국신용정보원은 비식별화(de-identification) 상태로 개인질병정보를 수집·관리하게 된다.
- **빅데이터에 의한 개인정보의 식별화 위험**
 - 빅데이터(Big Data)란 정보통신 기술,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거대한 양의 디지털 정보가 생성되는 환경에서 새로 정립된 정보 개념으로, 정보 풀(pool)에서 부가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특정한 정보들을 추출, 조합, 분석하는 기술을 가리킨다.
 - 금융위원회가 2015.6.3. 발표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은 개인의 비식별(de-identification) 정보라면 자유롭게 활용하게 한다는 것이 핵심, 그러나 금융위 방안은 비식별 정보가 재식별화(re-identification)될 위험성을 무시하고 아무런 대책을

담고 있지 않음

*비식별 정보는 누구의 정보인지 확인할 수 없게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의 정보가 없는 개인 정보를 가리키며, 재식별화란 비식별 정보를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하는 것을 가리킴

-2014.12.23.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재식별시 즉시 파기 및 비식별화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달리 금융위는 재식별화 위험에 대한 대책 없이 비식별 개인 정보를 빅데이터 산업이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임

-금융위의 입장은 개인신용정보가 광범하게 불법 유통되는 상황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쉽게 비식별정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IT기술의 발달을 간과하고 있으며, 해외의 개인정보 규제 추세와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음

□ 정책

• 개인질병정보 수집과 집중 금지(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개인질병정보 수집과 집중을 금지

-금지는 금융위원회의 행정예고에 따를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형태로 명문화한다.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해체

-방대한 개인정보를 집중하는 것 자체로 개인정보 보호 가치에 위배되며, 기업과 권력에 의한 개인정보 활용과 통제를 용이하게 하여 '빅브라더 사회'의 위험성을 내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해체한다.

• 재식별화 대책 마련(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재식별화 위험에 대한 방지 규정을 넣는다.

-주요 내용은 빅데이터 산업에 활용되는 개인정보는 수집 단계에서 철저한 비식별화 의무를 부과하며, 비식별 정보를 재식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재식별화된 정보의 즉시 파기 및 비식별화 의무를 부과하고, 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